

## ‘노후 원전’ 한빛 1·2호기 위험한 수명 연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을 통해 영광 한빛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가 각 10년씩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정부, 2025년·2026년 가동 중단 방침 바꿔 10년씩 늘려 끊이지 않는 안전성 시비 속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강행

안전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영광 한빛원전 1·2호기가 10년씩 연장 가동된다. 애초 오는 2025년(1호기), 2026년(2호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2년 만에 바뀐 것으로, 연장 가동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특히 기존 한빛원전 1·2호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요구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4호기 운영을 놓고도 주민들이 발전기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 갑) 의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12일 확정, 고시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빛원전 1·2호기의 폐로(廢爐) 시기를 10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10차 전력계획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각각 15%, 10% 아래까지 대폭 축소한다는 게 핵심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

애초 정부는 2년 전인 2021년 1월 발표한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침을 세우고 한빛원전 1호기의 경우 오는 2025년, 2호기는 이듬해인 2026년, 3호기는 2034년에 폐로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의 전력수급 정책이 새 정부 들어 바뀐 것으로, 정부는 이번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 1·2·3호기를 폐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10차 기본계획에는 9차 계획에 담겼던 한빛원전 1·2·3호기 폐로 시기가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한빛 1호기와 2호기가 계속운전 대상인 원전 10기 안에 포함돼 있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전력 공급 물량을 포함됐던 한빛 1·2·3호기가 9차 계획 때와 달리, ‘공급 물량 제외설비’에서 빠지며 가동 연장을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0기의 원전에 대

해 계속운전을 추진하기 위해 가동중단을 최소화하고, 계속운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한다’고 밝히면서 한빛 1·2호기를 포함시켰다는 것이 이용빈 의원의 실명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건설중인 3기(신한울 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조기 준공을 기본으로 하고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설계 수명(최대 40년)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10년~20년까지 계속운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원전) 계속운전’은 10년 단위로 연장되기 때문

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승인이 이뤄지면 한빛1호기는 2035년 12월, 한빛2호기는 2036년 9월까지 가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계획에 따라 전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도 본격화될 계획이다.

전남의 경우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은 상태로, 풍력발전을 늘린다는 정부 계획(202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 태양광 87%, 풍력 13%→2030년 태양광 60%, 풍력 40%)에 따라 전남 풍력 발전 산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카드대금·공과금 25일로 자동 연기

이번 설 연휴(21~24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된다.

환전·송금 등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연장된

다. 연휴 전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25일로 연기된다.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23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5일로, 24일이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6일로 각각 순연된다. /연합뉴스

나홀로 가구 1천만 ‘눈앞’  
전남 고령화를 25% ‘최고’  
지난해 인구 5143만9038명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43만9038명으로, 2021년(5163만8809명)보다 19만9771명(-0.39%) 줄어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자연적 요인(11만8003명)에 의한 감소뿐 아니라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10만1938명)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이어졌으며, 여자 인구도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남녀간 인구 격차는 16만5136명으로,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여자 2580만2087명, 남자 2563만6951명이다.

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의 41.0%(972만4256세대)를 기록해 1000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반면, 3인·4인 세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를 합하면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이같은 흐름으로 세대원 수는 줄면서 세대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50대(16.7%)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말에 비해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해 2022년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성별 고령인구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남자(15.9%)보다 4.2%포인트 높다.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전남(25.17%), 경북(23.78%), 전북(23.20%), 강원(22.77%), 부산(21.47%), 충남(20.58%) 등 6곳은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바이탈뷰티



##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